

2026 직무전문 교육

전북 생태자산 증진 및 지역 활성화 정책

보전·복원·활용으로 만드는 전북형 생태경제 선순환

심윤진 |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수

2026. 5. 18(월) 13:00 ~ 14:50



오늘 강의 흐름

1장

전북의 생태자산, 무엇이 있고 무엇을 잃었나?

생태자산 현황 | 30년간의 훼손 | 탄소흡수량 감소 | 악순환의 구조

2장

보전하면 — 지키는 것이 곧 탄소중립·주민소득

OECM (자연공존지역) | 생태계서비스지불제 (PES)

3장

복원하면 — 되살리는 과정이 일자리·관광

녹색복원 | 익산 왕궁 선도사례 | 도시생태축복원 |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4장

활용하면 — 생태자산이 전북의 성장엔진

생태관광+ | 생태경제 특화지역 | 다부처 자원 연계

5장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제도 정비 | 부서 간 연계 | 국비 자원 확보 | 단계별 실행

"우리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은
통장이 하나 있습니다"



도시의 나무들이 품고 있던 탄소 120만 톤,
6년의 추적 끝에 밝혀 내다

탄소 배출 및 흡수량 비교

배출량



50만 대
연간 배출량



서울시 가정용 전력의 약
2-3개월 배출량



흡수량



6천만 그루
1년 흡수량



전체 산림 흡수량의
3%

그렇다면 전북은?

도시 나무 한 그루도
국가 자산입니다.

전북의 갯벌, 산림, 논습지는
그보다 훨씬 크고 풍부한
아직 제대로 열어보지 않은
통장들입니다.



동부산악권

산림면적 71.8%
국립공원 2개·도립공원 2개



중부평야권

농경지 논습지·둠병 1,287곳
대규모 평야·논습지·둠병 생태계



서부연안권

고창갯벌 세계자연유산('21)
전북 서해안 세계지질공원 인증('23)

오늘 강의 : 전북의 생태자산을 보전·복원·활용해서 탄소중립과 지역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법

1장

전북의 생태자산, 무엇이 있고 무엇을 잃었나?



생태자산 현황 | 30년간의 훼손 | 탄소흡수량 감소 | 악순환의 구조

생태자산이란 무엇인가?

생태자산(Natural Capital) = 산림·갯벌·논습지·하천 등 자연이 물려준 자산
이 자산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생태계서비스라고 합니다



공급서비스

식량, 물, 목재, 약재



조절서비스

탄소흡수, 홍수방지
수질정화, 열섬완화



문화서비스

생태관광, 휴양
경관, 교육



지지서비스

서식지 제공
생물다양성 유지

💡 생태자산이 풍부할수록 탄소흡수↑, 홍수피해↓, 관광수입↑, 주민소득↑ → 이것이 '생태경제'의 핵심

전북은 생태자산의 축소판_산림·평야·연안이 공존하는 지역



동부산악권

📍 주요 자산

- 산림면적 평균 71.8%
(전국 평균 63%)

🌿 생태계서비스

탄소저장·흡수

생태관광·힐링

수자원 공급

국립공원 2개 (지리산·덕유산)
도립공원 2개, 백두대간 포함



중부평야권

📍 주요 자산

- 농경지 논습지·둠병 1,287곳
- 둠병·저수지 기반 철새 서식처

🌿 생태계서비스

식량 공급·친환경농업

생물다양성 유지

철새 서식지

만경강·동진강 수생태축
전국 최대 규모의 평야와 논습지가 발달한 지역



서부연안권

📍 주요 자산

- 고창 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21)
-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23, 고창·부안)

🌿 생태계서비스

블루카본 흡수

세계적 관광지

해양생태계 보전

도시·해안 생태경관
새만금 생태복원과 블루카본 연계 가능성

세계가 인정한 전북의 생태자산

국제 인증 연혁

2010

고창갯벌 람사르습지 등록

2011

고창 운곡습지 람사르습지 등록

2013

고창군 전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21

- 고창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 고창 고인돌·운곡습지마을 UNWTO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
- Green Destinations 세계 100대 지속가능 관광지 선정

2023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2023~2024

고창 고인돌·운곡습지마을
한국관광 100선 선정

30년간 전북의 생태자원이 줄었다

330km²

자연공간 감소

(1980년대 말 → 2010년대 후반)

→ 약 4% 감소

4.0%p

시가화·건조지역 증가

(1980년대 말 → 2010년대 후반)

→ 1.52% → 5.52%

35.6%

전주시 탄소저장량 감소

(1990년 대비 2023년)

* 전주시 사례 분석 결과

→ 도시화에 따른 탄소흡수 기능 저하

악순환 구조



전북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있어 생태자산의 역할



규제만으론 부족하다 –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 기존 방식의 한계

신천습지 보호지역 지정 절차 중단 ('23.4)

만경강 하천습지 중 생물다양성이 높고 야생생물 서식 가치가 높으나, 행위제한 우려와 주민 반대로 지정 절차 중단

전북 보호지역 지정 편중

보호지역 비율의 시·군 편차가 크고, 동부산악권 중심으로 집중 규제 중심 정책에 대한 주민 부담과 생태계 보전 부정적 인식 확산

보전 vs 개발 갈등 반복

보호·규제 중심의 네거티브 정책
→ 주민참여 부족, 생태계서비스기반 지역발전 제한



✓ 새로운 방향 (포지티브 정책)

📄 경제적 보상 (생태계서비스지불제, PES)

보전 활동 계약·보상 → 주민 자발적 참여 유도

🌐 국제 인증 (OECM)

기존 토지이용을 존중하면서 생물다양성 보전 기여를 인정
→ 보전 브랜드·관리사업·생태관광 연계

🔧 복원으로 되살리기

훼손지 녹색복원
→ 탄소흡수원 확충 + 생태관광 기반 + 주민일자리 연계

🌱 생태경제로 활용하기

생태자산이 관광·소득·지역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국제·국가 정책 흐름 – 생태자산이 기후대응의 핵심 수단

IUCN 자연기반해법(Nbs)

자연기반해법 (Nbs)

자연생태계의 보호·복원·관리를 통해
기후·재해·수자원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 생태자산 보전 = 기후대응 수단

K-M GBF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2022)

30by30 목표

2030년까지 육상·해양의 30%를 보호지역+OECM으로 보전·관리

→ OECM 제도의 국제적 근거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 '23 수립)

생태복원·OECM·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

자연환경복원, 자연공존지역 확대, 생태계서비스 보상체계 강화

→ 지자체 실천 과제 확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2025)

2030년까지 보호지역·자연공존지역 30%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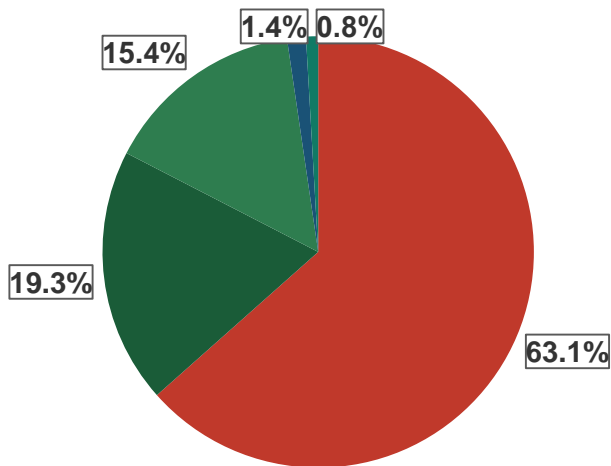
4대강 자연성 회복, 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 확대, 생태관광 활성화

→ 국비사업 연계 가능

전북 생물다양성 정책 예산 현황

'25년 기준 총 9,670억 원 투입 중이나, **63%가 위협요인 관리에 집중** – 관리기반·인식증진·시민참여 예산은 약 2.3%에 그침

전북 생물다양성 관련 예산 분포 ('25년, 9,670억 원)



■ 위협요인 관리
 ■ 증진·자연혜택
 ■ 생태계 보전·복원
■ 인식증진·참여
 ■ 관리기반 확충

출처: 천정윤·조하진(2025) 재구성

| | | |
|--------------|---|-----------------|
| 63.1% | 생물다양성 위협요인 관리 외래종 퇴치, 서식지 훼손 방지 등 규제·단속 중심 사업 | 현재 집중 |
| 19.3% | 생물다양성 증진·자연혜택 강화 생태관광, 탄소흡수원 확대, 생태경제 활성화 등 | 확대 필요 |
| 15.4% | 생태계 보전 및 생태환경 복원 생태계 보전, 복원, 보호지역 관련 사업 | 확대 필요 |
| 1.4% | 생물다양성 인식증진·시민참여 교육, 홍보, 시민과학 등 지역사회 연계 사업 | 대폭 확대 필요 |
| 0.8% | 지역 생물다양성 관리기반 확충 생물다양성 조사·DB 구축, 거버넌스 체계 마련 | 대폭 확대 필요 |

→ 위협요인 관리 중심 예산에서 생태경제·관리기반·시민참여 예산으로 균형 전환이 필요

전북 생물다양성 정책 공백 – 무엇을 못 하고 있나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K-M GBF 대응 관점에서 전북이 추가로 추진해야 할 과제 89개
 특히 이행·주류화, 위협요인 저감, 지속가능 이용·이익공유 분야의 정책공백이 큼

31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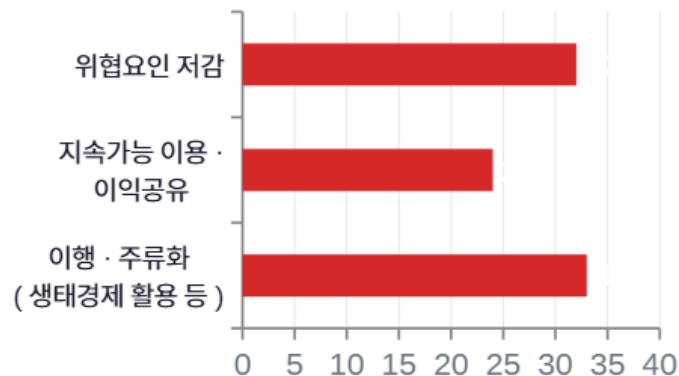
현재 추진 중인
 정책·사업 수
 '25년 기준

VS

89개

향후 추진
 필요 과제 수
 국가전략 대비 미추진

분야별 미추진 과제 수



출처: 전정윤·조하진(2025)

이행·주류화 수단 (33개)

OECM 발굴, 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 확대,
 ESG-TNFD 기업 연계 등
 생태경제 핵심 수단 대부분 미추진

지속가능 이용·이익공유 (24개)

생태관광 활성화,
 생물자원 이용 체계,
 지역주민 이익공유 방안 부재

위협요인 저감 (32개)

외래종 추가 관리,
 서식지 복원 확대,
 생태계 교란 방지 보완책

→ OECM 발굴, 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 확대, 생태관광 활성화는 89개 정책공백을 메우는 핵심 출발점

2장

보전하면 — 지키는 것이 곧 탄소중립·주민소득

OECM (자연공존지역) | 생태계서비스지불제 (PES)



자연공존지역(OECM)이란?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CBD, 2018)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관리·거버넌스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 효과가 장기적으로 인정되는 지역

보호지역 vs OE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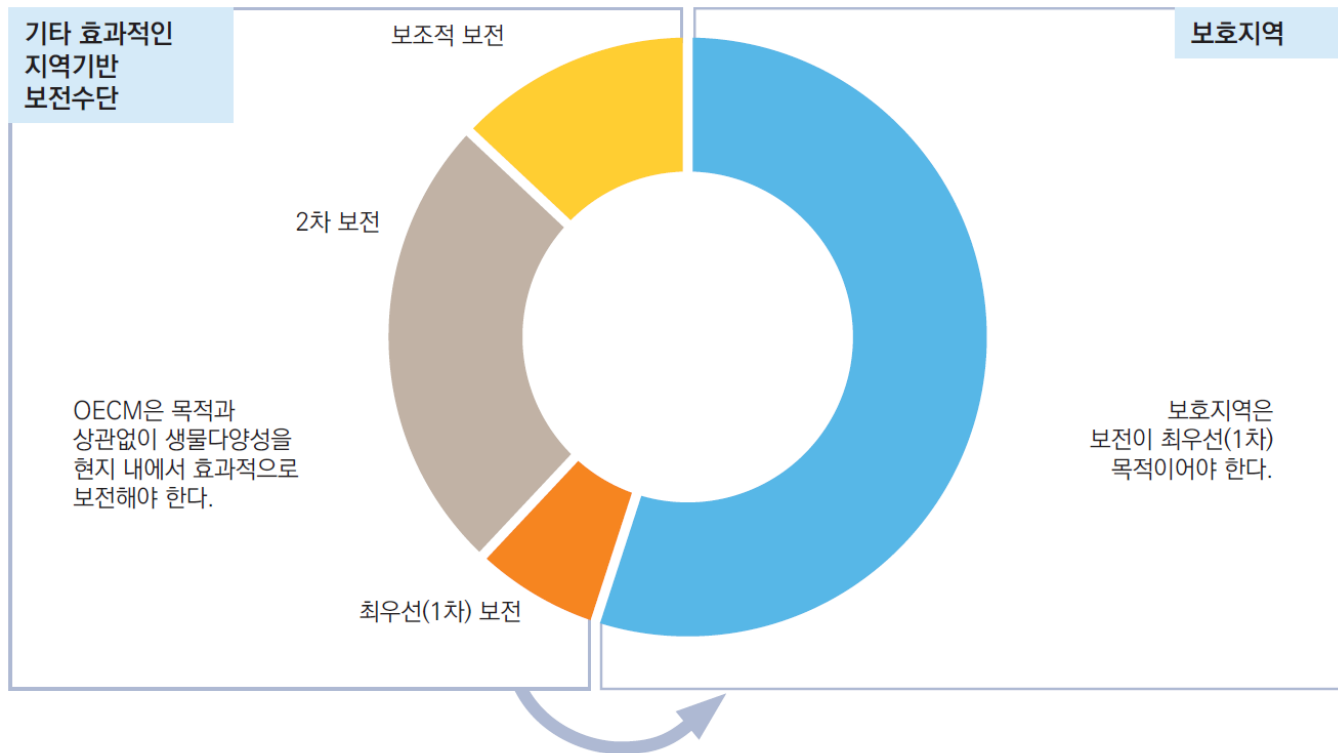
⊘ 보호지역

- 보전 목적이 최우선
- 법적 지정·관리 중심
- 행위제한 가능성
- 신규 지정 시 주민 협의와 절차 필요

☑ OECM (자연공존지역)

- 지정 목적은 다양하나 보전 성과로 인정
- 민간·지역 자율 참여
- 주민소득·생태관광 연계 가능
- 조건 충족 시 유연한 인정 가능
(생물다양성 가치, 관리체계, 이해관계자 합의, 장기적 보전 효과 필요)

자연공존지역(OECM)이란?



보전 목적이 최우선인 곳은 관련 거버넌스 기관이 보호지역으로 승인하면 OECM에서 보호지역으로 변경된다.

OECM: 보전과 지역활성화를 함께 달성하는 전략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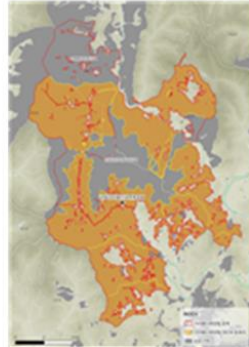
보도시점 2025. 4. 15.(화) 배포 2025. 4. 15.(화) 9:00

수목원·휴양림, 산림OECM으로 첫 등록 - 생물다양성 보전 새 이정표

- 생물다양성협약 기준 충족한 3개 산림 지역 등재, 후보지 조사도 본격화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일대
산림OECM 현황



국립가리왕산자연휴양림 일대
산림OECM 현황



국립경봉산자연휴양림 일대
산림OECM 현황

보호지역 + OECM 등록 현황

보호지역 현황 상세

South Korea

대한민국

총 보호지역 개수
(보호지역 & OECM)

1,767 개

총 보호지역 면적
(보호지역 & OECM)

27,656.66 k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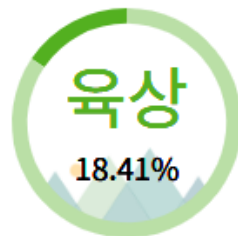
보호지역 개수

1,751 개

보호지역 면적

27,454.23 km²

보호지역 면적비율(커버리지) 통계



육상 보호지역

18,466.7 km²



해양 보호지역

9,189.9 km²

OECM: 보전과 지역활성화를 함께 달성하는 전략

탄소중립 효과

K-M GBF 30by30 기여
국제 보전목표 이행 기반 확대

탄소흡수원 보전·관리 강화
산림·갯벌·습지 훼손 방지 및 복원 연계

생물다양성 위기 대응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호

국가 온실가스 흡수원 목표 기여
자연기반해법 기반 기후대응 보완

← OECM(자연공존지역) 발굴 →

지역활성화 효과

국비사업 가점·우선순위 부여(제안)
생태복원·생태관광·지불제 사업 연계

생태관광 브랜드 가치 제고
국제인증 기반 홍보·방문객 유치 가능성 확대

마을 비즈니스 창출
거점마을 소득 증대

ESG·TNFD 기반 민간참여 가능성
기업 사회공헌·자연자본 공시 대응과 연계

전북 OECM 등록 목표: 2027년까지 1개소 → 2034년까지 3개소 등록 추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PES)이란?

자연을 보전·관리하는 주민·토지관리자에게 공익활동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
— 규제 중심에서 계약·보상 중심으로 참여를 유도

작동 원리



국내 현황 및 근거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근거
- 환경부 지원 국비 예산: 약 45억 원('24년 기준, 전체 환경부 예산의 0.03%)
- 활동유형은 환경조절·문화·지지서비스 등 22개 유형으로 확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활동 유형(22유형)

| 서비스 유형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활동유형 | | 세부 활동유형 | | | | |
|-----------------|---------------------|----------------|-------------------|------------------|------------------|---------------------|---------------|
| 환경 조절 서비스 | 가.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 | 1. 식생 군락 조성·관리 | 01. 기후변화대응숲 조성·관리 | 가. 경작지 | 1. 친환경적 경작 | 10. 휴경 | |
| | 나. 수질 개선 | 1. 하천관리 | 02. 하천 환경 정화 | | | 2. 야생동물 먹이 제공 | 11. 친환경 작물 경작 |
| | | 2. 수변식생대 조성·관리 | 03. 수변식생대 조성·관리 | 12. 벼 등 미수확 | | | |
| 다. 자연재해 방지 | 1. 저류지 조성·관리 | 04. 저류지 조성·관리 | 나. 야생동물 서식지 | 1. 생태계 조성·관리 | 13. 습터 조성 관리 | | |
| 문화 서비스 | 가. 자연경관 개선 | 1. 경관숲 조성·관리 | | | 06. 경관숲 조성·관리 | 나. 야생동물 서식지 | 1. 생태계 조성·관리 |
| | 나. 자연경관 조성 | 2. 산책로 조성·관리 | 07. 생태탐방로 조성·관리 | 2. 생물종 서식지 조성·관리 | 15. 보리·울무 등 재배 | | |
| | | 다. 자연자산 유지·관리 | 1. 자연자산 유지·관리 | | 09. 생태계 보전 관리 활동 | | |
| | | | | | | 17. 습지 조성·관리 | |
| | | | | | | 18. 생태 웅덩이 조성·관리 | |
| | | | | | | 19. 관목 덩굴 조성·관리 | |
| | | | | | | 20. 초지 조성·관리 | |
| | | | | | | 21. 생태계 교란종 제거 | |
| | | | | | | 22. 멸종위기종 서식지 조성·관리 | |

전북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_ 보전활동이 보상으로 이어진다

📍 전북 추진 사례(2023년 기준)

군산시 보리경작·벗짚존치 **400백만원**
철새도래지 먹이제공

김제시 보리경작지 피해농가 손실보상 **320백만원**
겨울철새 서식지 보호

익산시 보리·밀 재배 **180백만원**
만경강·동진강 철새 먹이제공

고창군 동림저수지 일원 벗짚존치 **166백만원**
람사르습지 생태보전

부안군 보리재배·벗짚존치 **106백만원**
겨울철새 먹이제공

🎯 두 마리 토끼

🌿 탄소중립

- 벗짚존치·보리재배 → 논습지·농경지 생태기능 유지
- 생태탐방로·숲 관리 → 산림 훼손 방지와 흡수원 관리
- 수변식생대·습지 조성 → 탄소저장·수질정화 기능 증진

💰 지역활성화

- 농민 직접 보상 → 농촌소득 보전
- 생태관광지 연계 → 방문객·마을수입 확대
- ESG기업 참여 → 지역 자원 확보 가능성

전북형 PES 확대 방향: 보호지역 중심 → 생태관광지 연계 → 녹색복원지역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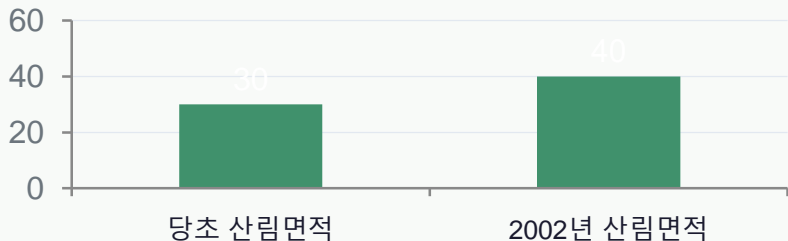
해외 사례: 생태계서비스지불제로 보전 효과와 경제적 보상을 함께 달성

🌍 코스타리카

방법

국가산림기금(FONAFIFO) 설립
화석연료 사용 부담금 약 3.5%를 재원으로
산림·초지 소유자와 지불제계약 체결

성과



🏠 미국 뉴욕시

방법

Catskill-Delaware 유역 수질관리

정수시설 설치비 60~80억 달러 + 연간 유지비 3~5억 달러 예상
→ 시설 건설 대신 10년간 15억 달러를 유역보호 활동에 투자
(정수시설 설치비의 20% 미만)

성과



80% 이상 비용 회피

시설 설치비 대비



수질 유지·개선

정수 기능 확보



시민참여 기반 유역관리

지역공동체 협력 체계

3장

복원하면 — 되살리는 과정이 일자리·관광



녹색복원 | 익산 왕궁 선도사례 | 도시생태축복원 |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녹색복원 — 훼손지를 살리면서 탄소도 채우고 지역도 산다

녹색복원 = 3종 목표 동시 달성



생태환경 복원

생물다양성 향상
생태계 구조와 기능 회복
자연의 회복탄력성 증진



생태경제 창출

생태계서비스 증진
역사문화 자산 융합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사회 회복

주민 참여 복원 활동
지역사회 함께 성장
자연공존지역 발굴

환경부 주요 녹색복원 사업 유형

자연환경복원사업

익산 왕궁 (전북 대표)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소규모 복원사업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고창·남원·익산 도심 복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훼손 하천의 수질 개선과 수생태계 회복

전북 선도사례: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 '예타 조사대상 사업' 선정

기사입력 : 2025년11월01일 13:44 | 최종수정 : 2025년11월01일 13:44



환경부·익산시·KEI·전북연구원 '원팀 협력'결실... 내년 예타 통과 '총력'
한센인 강제이주·축산단지 확장 182만㎡ 7년간 2437억원 투입 치유공간 복원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자치도는 1일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이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은 일제강점기 한센인 강제이주와 축산단지 확장으로 훼손된 약 182만㎡의 자연환경을 7년간 2437억 원을 투입해 생태적·사회적 치유 공간으로 복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이 사업은 생태통로 조성, 자연형 하천 및 계단식 습지 복원, 생물 서식지 조성, 생태탐방로 구축, 국립 자연환경복원센터 유치 등을 포함한다.

전북 선도사례: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

📄 사업 개요

- 대상: 집단축사 운영으로 훼손된 대규모 부지 179만㎡
- 선정: 환경부 자연환경복원사업 시범사업 선정 ('23.5)
- 방식: 4개 마을 연계 주민참여형 복원 추진

🌀 비전

탄소중립-생태문화 공존
에코토피아 조성

하나의 사업으로 세 가지를 동시에

① 탄소중립

토양·하천·산림·초지 연속생태계 복원

탄소흡수원 신규 조성

기후대응기금 연계 가능

② 생태관광

생태탐방로 및 생태관광지 조성

국립자연환경복원센터 조성

방문객 유입 → 지역소득

③ 지역경제

4개 마을 주민 복원활동 참여

민간기업 ESG 참여 유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연계

전북 녹색복원사업 추진 구상_도시생태축에서 광역 녹색인프라로 확장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고창

고창읍성 생태축 복원

→ 도시열섬 완화 + 문화관광 연계

남원

향교공원-광치천 생태축 복원

→ 하천생태계 복원 + 생활관광

익산

장점마을 생태복원

→ 오염지 복원 + 주민건강 회복

익산

목천포천 수변생태축 복원

→ 도시 수변생태공간 + 탄소흡수

메가그린인프라 구상(제안)

새만금·만경강·동진강 탄소플러스 메가그린인프라 구축

탄소흡수원 증진

홍수·가뭄 대응

생태관광 연계

전주·완주 광역 녹색길(Greenway) 조성

도시 탄소흡수원

주민 생활인프라

탄소중립 교육

전북 녹색복원사업 _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고창읍 도시생태축(서식지) 복원사업 조감도



남원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 생태힐링 환경 조성

윤순기 기자 | 입력 2026.03.15 11:35 | 수정 2026.03.15 11:35

0

가 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통해 체류형 관광과 생태환경 조성 추진
 생활폐기물 광역소각시설 설치·자원순환으로 친환경 도시 기반 구축
 탄소중립 정책, 환경오염 관리, 생활환경 개선 통해 안전한 환경 조성



전북 녹색복원사업 _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장수·부안·임실, 기후부 '생태 복원 사업' 선정...13억 원 확보

송고 2026-04-10 10:44



임채두 기자
+ 구독



부안 건설제 수생태계 복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출처: 임채두(2026. 4. 10.); 이재진(2025. 12. 17.)

장수군, 뜬봉샘 국가생태관광지...국비 4억 5000만 원 확보

오이재진 | ①웹승인 2025-12-17 15:09 | ②수정 2025-12-17 15:09 | ③댓글 0

훼손 산림 복원·멸종위기종 서식지 확장 추진
단절된 생태축 회복으로 생태관광·환경교육 거점 강화



장수 뜬봉샘 국가생태관광지 내 훼손된 산림 생태축 복원과 멸종위기종 서식지 확장을 통한 지역 생태계 건강성 회복

4장

활용하면 — 생태자산이 전북의 성장엔진

생태관광+ | 생태경제 특화지역 | 다부처 자원 연계



생태관광 여건 변화 _ 새로운 수요가 전복을 향하고 있다

자연·힐링 수요 증가



코로나19 이후 자연공간 방문 수요 증가
개인·소규모 여행, SNS 공유 문화 확산
걷기·캠핑·하이킹 등 자연 기반 여가 확대

다양한 방문객층 확대



가족·고령층·청년층 등 방문객층 다양화
고령화에 따른 여가·건강형 방문 증가
한류 확산에 따른 외국인 지역관광 가능성 확대

생물문화다양성 접목



자연생태자원 + 역사문화자원 연계 체험
전복의 전통생태지식·농촌문화 활용 가능
지역과 마을·문화·생태의 복합 체험

탄소중립·지속가능 관광








친환경·저탄소 관광 수요 증가
ESG·TNFD 흐름과 연계한 민간참여 가능성
생태관광이 탄소중립 수단으로 부상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전복 생태관광을 '탄소중립 + 지역경제 + 힐링'의 복합 상품으로 고도화해야 합니다

전북 생태관광 10년 – 성과와 한계

✓ 10년의 성과

-  생태관광지 12개소, 천리길 44코스(405km) 조성
-  국가생태관광지 3곳, 국가지질공원 3곳 인증
-  고창 고인돌·운곡습지마을 :
UNWTO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 지속가능 관광 우수사례
-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설립·운영
-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제정

⚠ 극복해야 할 한계

-  10년간 동일 대상지·동일 유형 → 차별성·경쟁력 부족
-  시설 중심 투자 편중 → 소프트파워(해설·프로그램) 부족
-  학생·마니아층에 국한 → 신규 수요층 창출 한계
-  먹거리·굿즈 등 민간 비즈니스 창출 미흡
→ 지역경제 파급 제한
-  역사문화·산림·해양 등 타 분야와의 연계 부족

→ 이제 '생태관광+'로 _ 더 넓고, 더 깊고, 더 지속가능하게

전북 생태관광+ : 자연·문화·지역 플러스

비전: "자연·문화·지역 플러스, 글로벌 전북 생태관광+"



연계와 통합

점→선→면 확대
권역화·광역화



인구감소 대응

생활인구 유입
마을비즈니스 창출



생물문화다양성

자연+역사+문화
전통생태지식 활용



탄소중립 관광

친환경 인프라
ESG-TNFD 기반 민간참여 연계

10대 추진과제

- ① 시·군별 생태관광+ 지역 조성
- ②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운영
- ③ 전북자치도 생태관광 사업 국내외 인증
- ④ 생물문화다양성 체험 프로그램 개발
- ⑤ 마을비즈니스 사업 개발
- ⑥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국제페스티벌 개최
- ⑦ 전북 생태관광 통합해설사 양성
- ⑧ 생태관광 증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 ⑨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확대 개편
- ⑩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전문가 자문단 운영

에코캠핑 삼천리길 : 전북 생태관광+의 핵심 인프라

에코캠핑 삼천리길 : 전북 14개 시·군 전역을 연결하는 장거리 탐방로로,

체류형 생태관광 기반 조성 및 주민소득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북 생태관광+의 핵심 광역 인프라

1,037.4km

총 노선 길이

걷기 680.5 + 자전거 326.9
+ 황토길 30km 포함

60개소

거점마을

선도거점마을 14개소
일반거점마을 46개소

618억 원

총 사업비

주요 재원 : 지방소멸대응기금

14개 시·군

연결 범위

전북 전역 광역화

 선도거점마을 - 14개소 (시·군별 1개소)

- 종합안내(전체 노선), 교통편의·주차
- 숙식·캠핑장, 탐방프로그램 운영
- 비즈니스·위케이션 등 복합기능 집적

 일반거점마을 - 46개소 (시·군별 3~5개소)

- 정보안내(노선·마을), 휴식·숙식 제공
- 마을 생태·문화 탐방, 마을정원 조성
- 간이쉼터·소형 캠핑장 운영

기대효과: 생활인구 유입으로 지방소멸 대응 + 체류형 관광으로 지역소득 창출 + 탄소중립 생태관광 기반 마련

에코캠핑 삼천리길 : OECM·PES·마을비즈니스·ESG를 연계하는 실행 플랫폼

OECM(자연공존지역) 발굴 검토

- 삼천리길 주변 생태관광지·복원지역·거점마을 우수 생태자산을 후보지로 발굴
- 2027년까지 1개소, 2034년까지 3개소 발굴 제안
- K-M GBF 30×30 목표 이행에 기여
- 전북특별법 특례 기반 국가인증 연계 검토

생태관광 증진 PES 도입

- 관광지 주민·관리자의 보전·관리·모니터링 활동 보상
- 5개 시·군 선정, 총 45억 원 지원 제안 (시·군당 연 1억 원, 5:5 매칭, 총 9년)
- 「생물다양성법」 제16조 및 전북특별법 특례 발굴과 연계
- 생태계서비스 수혜자 부담 원칙을 반영한 자원 다변화 검토

60개 거점마을 비즈니스 모델

- 숙박·먹거리·체험·교통서비스 운영
- 그린 굿즈·먹거리·걷기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수익 일부를 마을 공동기금으로 환원
- 통합해설사 양성 → 안정적 일자리·전문인력 확보

ESG·TNFD 기반 민간참여 자원 연계

- ESG 경영·자연자본 공시 흐름 활용
- 기업 자연자본 투자·삼천리길 관리후원 연계 검토
- 기업의 PES 자원 참여+생태계보전부담금 감면 인센티브 검토
- K-생태관광 글로벌 브랜딩과 연계한 한류·외국인 방문 확대

자원 구조: 지방소멸대응기금 기반 + PES 국비 연계 + ESG 민간참여 + 전북특별법 특례 인센티브 검토

전북형 생태경제 – 보전·복원·활용을 한 지역에서 통합한다

생태경제 특화지역(제안)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생태자산을 보전하면서 생태관광·생태복원·PES를 통해 지역특화 생태경제를 창출하는 지역

주요 대상지역

만경강·동진강 수생태축

(논습지·들판)

PES + 생태관광 + OECM 연계 적용 검토

철새도래지 보전 = 탄소흡수 + 농민소득 보전

삼천리길 추진지역

(14개 시·군 60개 마을)

숙박·체험·해설 마을비즈니스 육성

생태관광 인증 성과를
국비 공모사업 대응자료로 연계 활용

익산 왕궁 복원지역

(179만㎡ 훼손지)

복원사업 + OECM + PES 연계 검토

탄소중립·생태문화 복합공간 조성

다부처 자원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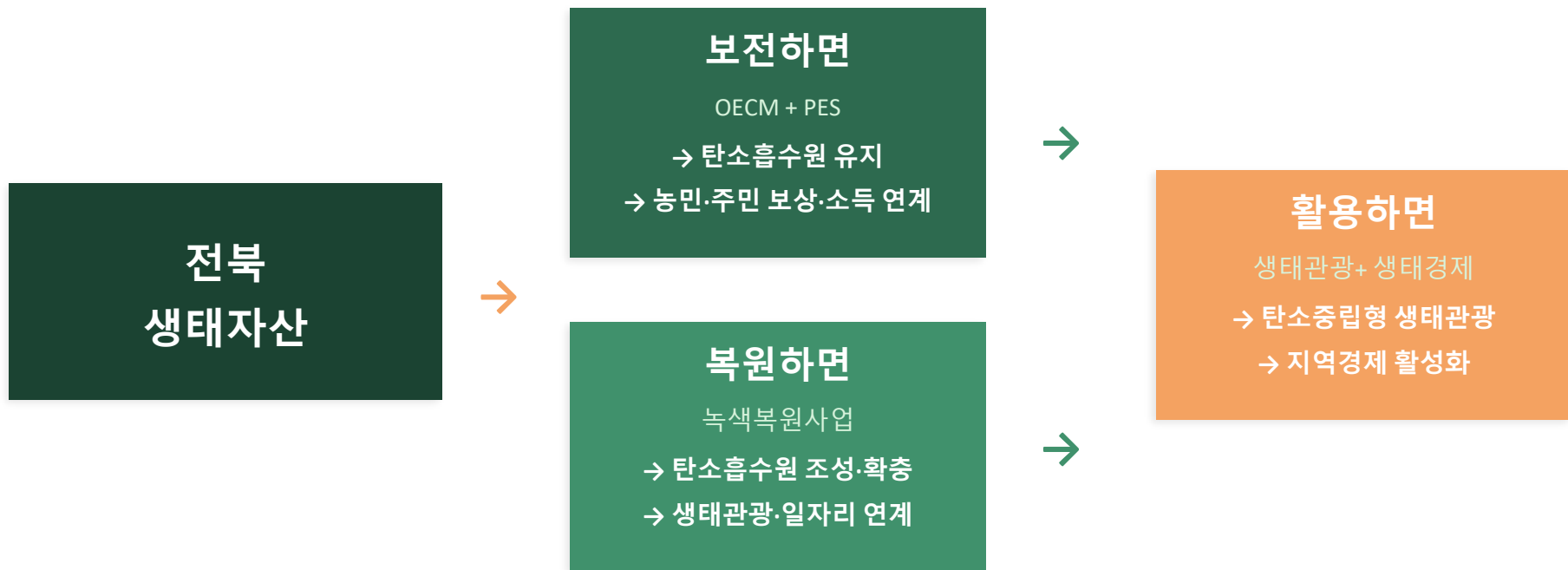
행안부 지방소멸기금

환경부 기후대응기금

문체부 관광진흥기금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전북형 생태경제 선순환 – 보전·복원·활용이 하나로



생태자산 하나가 탄소흡수원이 되고, 관광자원이 되며, 주민소득으로 연결되는 것
– 전북형 생태경제의 선순환입니다.

기업도 온다 — ESG·TNFD와 전북 생태자산의 연결

ESG 경영

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기업이 환경보호, 지역사회 기여, 투명한 지배구조를 고려해 경영하는 방식

→ 생태자산 보전 활동은 ESG의 환경(E) 및 지역사회 기여(S)와 연결 가능

전북 적용: 전북 생태관광지, 생태복원사업, 산림·습지·하천 보전활동에 기업 후원·기부·PES 예산지원을 연계

TNFD

자연자본 관련 재무정보 공시

기업의 자연 의존도·영향, 자연 관련 위험과 기회를 공시하는 체계

→ 생태자산은 보전 대상일 뿐 아니라, 기업이 자연 관련 위험을 줄이고 투자 기회를 찾는데 활용할 수 있는 자산

전북 적용: 전북의 생태복원·OECM·생물다양성 보전사업에 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그 성과를 ESG 활동 및 TNFD 자연자본 공시에 활용 가능하도록 성과지표·모니터링 체계와 연계

국내 사례: 제주형 PES에 기업 ESG가 결합되다

제주 자연 보호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기업도 동참

송고 2025-05-12 10:52



고성식 기자
+ 구독

제주도, 기업 ESG 연계 시범 사업...13일 첫 협약식



국내 사례: 제주형 PES에 기업 ESG가 결합되다

| 구분 | 내용 |
|--------|---|
| 사례 |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업 ESG 연계 시범사업 |
| 참여 주체 | 제주도, (주)리브, (주)아세즈, 서호동마을회, 제주도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 |
| 방식 | "기업 ESG 경영 연계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운영 협약" 체결 |
| 기업 역할 | 2년간 1,200만 원 상당의 자금·물품 지원, 임직원 생태서비스 증진 활동 참여 |
| 주민 지원 | 생태계서비스 증진 활동 참여 주민에게 인건비 등 지원 |
| 제도적 의미 | 마을·지역단체 중심 PES에 기업 ESG 재원을 연계한 전국 첫 기업 참여형 모델 |
| 전북 적용 | 삼천리길 거점마을, OECM 후보지, 생태복원지, PES 대상지에 기업 후원·임직원 참여 연계 가능 |

기업이 PES 계약의 직접 주체가 아니더라도,

ESG 협약·후원·임직원 참여 방식으로 생태계서비스 증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5 장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제도 정비 | 부서 간 연계 | 국비 자원 확보 | 단계별 실행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한 것

1장

전북의 생태자산 – 무엇이 있고 무엇을 잃었나

갯벌·산림·논습지·도시녹지는 탄소흡수, 홍수조절, 생태관광, 지역소득을 제공하는 핵심 생태자산이다.
그러나 지난 30여 년간 토지이용 변화와 개발로 자연공간이 감소했고, 도시녹지와 생활권 나무의 탄소흡수 가치도 정책적으로 더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3장

복원하면 – 되살리는 과정이 일자리·관광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은 대규모 훼손지를 탄소흡수원과 생태관광 기반으로 전환하는 선도 모델이다.
녹색복원은 단순한 예산집행이 아니라 지역 일자리, 지역사회 회복, 관광수요를 함께 창출하는 투자다.

2장

보전하면 – 지키는 것이 곧 탄소중립·주민소득

OECM(자연공존지역)은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관리와 거버넌스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 성과를 인정받는 수단이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는 주민·토지관리자의 보전활동에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다. 두 수단을 삼천리길·생태관광지·복원지역과 연계하면 보전과 주민소득을 함께 높일 수 있다.

4장

활용하면 – 생태자산이 전북의 성장엔진

에코캠핑 삼천리길은 생태관광, OECM, PES, ESG 민간참여를 연결할 수 있는 실행 플랫폼이다.
생태자산이 관리·복원·활용될 때 전북은 탄소중립과 지역활성화를 함께 추진하는 글로벌 생태경제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

오늘 강의의 핵심 메시지

01

전북의 갯벌·산림·논습지는 이미 탄소흡수·홍수방지·관광·소득을 동시에 제공하는 생태자산입니다.

02

도시 나무도 탄소흡수원으로 평가되는 시대입니다. 전북의 갯벌·산림·논습지 가치도 정책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03

OECD·PES·녹색복원은 별개 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전략입니다. 보전·복원·활용의 선순환입니다.

04

생태자산 보전은 곧 탄소중립 정책의 실행입니다. 두 가지는 하나입니다.

05

지금 당장 : 조례·계획 정비, OECD 후보지 발굴,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이 세 가지부터 시작하십시오.

제도 정비 · 부서 간 연계 · 국비 자원 확보

01

제도 정비

생물다양성 보전 조례 제정 또는 자연환경보전 조례 개정

전북특별법 특례 발굴·건의
→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대상지역 확대

OECM 후보지 조사·DB 구축 착수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정비
→ 생태경제 특화지역, OECM, PES 연계 근거 보완

02

부서 간 연계

탄소중립정책 + 생태관광 + 생물다양성 담당 부서 협력체계 구축

환경부·행안부·문체부·국토부 부처사업 연계 TF 구성

중간지원조직 통합 운영 검토

→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내 생물다양성 기능 추가

시·군 생태경제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03

국비 자원 확보

OECM·생태관광 인증 추진
→ 국비사업 공모 대응 근거 확보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대상지역 발굴·신청

익산 왕궁 등 녹색복원사업 성과 관리 체계 구축
→ 후속 유지관리·생태계서비스 연계 국비사업 확보 근거 마련

생태계서비스 활성화 촉진구역 지정 대응체계 마련
→ 후보지 발굴, 생태계서비스 평가, 사업계획 수립 기반 구축

언제, 무엇부터 시작할 것인가

단기 지금~2년

- 1 생물다양성 보전 조례 제정 또는 자연환경보전 조례 개정
- 2 전북 생물다양성 광역조사 착수
- 3 OECM 후보지 DB 구축
- 4 전북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
- 5 시·군 중간지원조직 지정

중기 3~5년

- 1 지역생물다양성전략(LBSAP) 수립
- 2 OECM 1개소 최초 지정 추진
- 3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활성화지역 시범 선정·운영
- 4 생태경제 특화지역 지정 방안 마련
- 5 생물다양성센터 설립 추진

장기 6~10년

- 1 보호지역 + OECM 30% 목표 달성 기여
- 2 OECM 3개소 지정 목표 달성 추진
- 3 생태경제 특화지역 성과 확산
- 4 AI 기반 생물다양성 정보체계 구축
- 5 글로벌 생명경제 거점 실현

누가, 무엇을 해야 하나

환경부 / 중앙부처

-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지원
-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예산 확대

- OECD·생태복원사업 국비지원 및 가점 제도 검토
- 전북특별법 특례 협의

전북특별자치도 (광역)

- 생물다양성 보전 조례 제정
- 생태경제 특화지역 지정

- 삼천리길 총괄·광역 생태계서비스 지원센터 지정·운영 검토
- 다부처 사업 연계 TF 운영

시·군 (기초)

- OECD 후보지 발굴·신청 및 이해관계자 협의
-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 발굴

- 지역 생태관광지·거점마을 운영
- 중간지원조직 지정·운영

지역주민·민간·기업


- 생태보전 활동 참여·PES 참여
- 마을비즈니스 운영

- ESG-TNFD 기반 기업 참여 연계
- 시민과학 생물다양성 조사

전북의 생태자산은 탄소중립의 기반이자 지역의 미래입니다

 보전하면 — OECM·PES로 탄소흡수원과 주민소득을 함께 지킨다

 복원하면 — 훼손지가 탄소흡수원과 생태관광 기반으로 전환된다

 활용하면 — 생태자산이 글로벌 생명경제의 성장엔진이 된다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 천정윤 외 (2022). 전라북도 광역생태축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전북연구원.
- 천정윤·배진아 (2023). 전북의 생태·환경자산 정책: 보호와 규제 중심에서 인식 증진과 경제적 지원으로 전환.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vol.290.
- 천정윤 외 (2023). 만경강·동진강 생태환경자산 목록화 및 가치창출 연구. 전북연구원.
- 천정윤·배진아 (2024). 전북특별자치도 생태·환경자산 가치 창출과 지역사회 회복을 위한 녹색복원 당면과제 제안.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vol.311.
- 천정윤 외 (2024a).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중장기 발전 전략 연구. 전북연구원.
- 천정윤 외 (2024b). 전북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 천정윤·조하진 (2025). 전북자치도 생물다양성 정책 추진상황 검토 및 대응방향 연구. 전북연구원.

참고문헌

국가·공공자료

- 관계부처 합동 (2023).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2024~2028).
- 국정기획위원회 (2025).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 산림청 (2025.4.15.). 수목원·휴양림, 산림OECM으로 첫 등록 — 생물다양성 보전 새 이정표. 보도자료.
- 이은엽 외 (2026). 도시의 나무들이 품고 있던 탄소 120만 톤, 6년의 추적 끝에 밝혀 내다. LHRI Focus, 76. LH토지주택연구원.
- 익산시 (2024).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 관련 제공자료. 미발간 내부자료.
- 환경부 (2024).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 한국보호지역 통합DB관리시스템 (<http://www.kdpa.kr>).

국제기구 및 언론 자료

- CBD (2018). Protected areas and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Decision 14/8).
- IUCN (2022). Nature-based solutions.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 IUCN-WCPA Task Force on OECMs (2019). Recognising and reporting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Gland: IUCN.
- 고성식 (2025.5.12.). 「제주 자연 보호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기업도 동참」. 연합뉴스.
- 김영호 (2025.3.21.). 「전북자치도, 지역민 힐링 공간 고창 생태축 사업 완료」. 전북일보.
- 이백수 (2025.11.1.).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 '예타 조사대상 사업' 선정」. 뉴스핌.
- 이재진 (2025.12.17.). 「장수군, 뜯봉샘 국가생태관광지... 국비 4억 5,000만 원 확보」. 전북일보.
- 임채두 (2026.4.10.). 「장수·부안·임실, 기후부 '생태 복원 사업' 선정... 13억 원 확보」. 연합뉴스.
- 윤순기 (2026.3.15.). 「남원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생태힐링 환경 조성」. 전라매일.